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15호 2022. 10. 12. (수)

공 포

조례 15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2
조례 15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조례 15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4
조례 15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5
조례 15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조례 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조례 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조례 15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13
조례 15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6
조례 1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조례 156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조례 156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규칙 9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6

고 시

제2022-130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33

공										
람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해 2021년 12월 31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의 폐지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미래전략실장”으로, “재무과 청사건립업무”를 “신청사건립업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2022. 8. 1.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실에서 신청사건립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현 소관부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간사를 미래전략실장으로, 서기를 신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함
(제8조)

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조례를 현행화함(제12조)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59호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청사관리업무”를 “신청사건립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2022. 8. 1. 자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소관부서가 미래전략실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운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현 소관부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변경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꿈나무”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운동을 하는 학생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및 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체육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꿈나무 발굴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체육꿈나무 지원사업)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운동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지원
3.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육성 지원 및 환경 개선사업
4. 체육꿈나무 심리상담·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꿈나무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체육꿈나무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육진흥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1. 제4조에 따른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검토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결정
3. 그 밖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중 체육꿈나무를 발굴 및 지원하여, 그들이 나아가 북구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 체육계를 빛내는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체육꿈나무 육성 계획 수립, 지원사업(제4조~제5조)
- 다. 체육꿈나무 육성 위원회의 설치(제6조)
- 라. 준용 및 시행규칙(제7조~제8조)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1호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하였거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기존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회의 참석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제4조의2)
- 위원 또는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자 등
- 나. 회의 참석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 (제8조)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로 하고,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제6조의2제3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사용·수익 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을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절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사용허가 수익계약 대상) 행정재산을 수익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물 등의 생산·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 “사용 수익 허가를”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를 “산출한다”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부료”를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로, “감면율”을 “대부료 등의 감면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및”을 “또는”으로, “감면율”을 “대부료 등의 감면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및”을 “또는”으로, “감면율”을 “대부료 등의 감면율”로 한다.

제30조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영 제88조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을 “공법상의 변상판정”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법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 검사(이하 “물품관리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 4. 21.시행) 반영,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근거 마련 및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추가
- 2)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
-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 확대
- 4) 수의계약 매각 대상에 승인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제외

나. 법령에 근거없는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 삭제

다.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현행화 및 인용조항 등 정비

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법령상 의무시설 배정 규정 신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 등”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개정사항(2021.12.21.)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 나. 조문 정비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문 체계를 갖추고,
-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확대하고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안 제9조)
- 나. 상위법의 약칭 추가 및 인용조항 정정 등 조문 정비(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호)
- 다.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근거 마련(제10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4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복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거나,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구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대한 사항(제3조)
-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제4조)
- 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생활임금의 결정 및 장려에 대한 사항(제8조부터 제9조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생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장정비구역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자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및 사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공포, 2022. 4. 28. 시행)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공포,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위임사항과 입법목적이 유사한

「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일부규정을 통합하여 조례안 제정

나.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행정적 지원사항 규정

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신청 및 관련 지원사항 규정

1)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접수·검토한 후 시장에게 승인신청

2) 구역 지정 시 임대차계약, 주차장설치, 조세·용자 등에서 법적 특례 적용

라.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 및 지역상생구역 업종제한 사항 규정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
2. “상인”이란 구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구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구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역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목표 및 조성방안
3. 자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 ③ 구청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② 구청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신청서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5분의 3 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경비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 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
 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
 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북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부산광역시 북구는 재정 자립도가 낮고 대표할 만한 특정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북구의 관광자원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으며 관광객들을 모객할 수 있는 특화된 콘텐츠 역시 부족한 것이 현실임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된 특정 형태의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며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라고는 볼 수 없음

그러므로 본 조례를 통해 북구 지역의 특색있는 거리 및 상권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예외 규정
- 나. 구청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규정
- 다.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취소 규정
- 라. 특화거리 사업성과 평가 및 지원사업 규정
- 마.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의원연구단체”를 “의원 연구단체”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최초 등록 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단체의 등록 등 심의)”를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을 위한”을 “위원회는”으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의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정책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제8조의3(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기준)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위원회 등”을 “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9조”를 “제8조의2”로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의원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한 과제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초 규정되어 있던 ‘정책연구용역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연구단체와 관련한 심사의 중복성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사 기능을 추가로 맡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문구 띄어쓰기, 불필요한 문구 삭제, 어색한 문구 정비 등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중)
- 나.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내용 신설(제8조의2)
- 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기준 신설(제8조의3)
- 라.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제9조 및 제10조)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56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제1항 중 “현지교통비,숙박비”를 “일비, 숙박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의”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의”를 “공무원”으로 한다.

■ 제개정(폐지) 이유

현행 조례 제3조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일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기타 일부 용어와 입법 체계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 중 법 규정에 없는 일부 내용 삭제(제3조)

나. 현행 법령에 맞지 아니한 용어 정비(제4조)

다. 기타 입법 체계상 미비점 정비(제2조, 제6조, 제8조)

공 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976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제5호, 제6호,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사용)조건	부산광역시 북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p>「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북구청장 귀하</p>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건물면적)			
<p>「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수익을 허가합니다.</p> <p>붙임 : 허가조건 1부</p> <p>년 월 일</p> <p>북구청장 (인)</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허 가 조 건

제1조(목적) 사용의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 구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소 재 지										
물 건 표 시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부속 사항
					종목					
		지목			구조			구조		
					용도			형식		
		면적	전 체 대부사용 m² m²		면적	전 체 대부·사용 m² m²		수량		
적 요										
허가 번호	사용목적	허가 (갱신)연월일 계약	기 간	사용료 및 대부료	사용료·대부료 징수		사 용 자			
					금액	징 수 연월일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 제·개정(폐지)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 4. 21.시행)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제15조, 안 별지 제5호, 제6호, 제8호) ☞ 사용·수익허가 → 사용허가

고 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30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 67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구포동 430-36	낙동대로1762번길 67	2022-10-07	2010-02-03	낙동대로의 시작점(시점)에서부터 약 17,6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0건)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0.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